

한국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기능

박 일 영
(가톨릭대학교)

《요약》

가톨릭 교회는 그 첫째 사명을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복음선포라고 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선교(宣敎 mission)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가 구체적으로 인간 삶의 자리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방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성하고 복음의 본래 정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당면 과제를 논의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의 주요 관심사는 교회의 쇄신이었다. “심각하고도 신속한 변화(mutatio profunda et rapida)”를 겪고 있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한국의 가톨릭 교회가 내세워주는 개인 구복적인 교회의 선교 방침으로부터 민족과 사회의 실제 삶에 대한 관심으로 본격적인 방향 전환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 서고부터이다. 그 때부터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사회 복음화”라는 우선적 선택을 통하여 인간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교회의 사회 복음화, 즉 민주화 운동은 어느 면에서 고고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선심 쓰듯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1980년대에 와서는 낮은 데로 임하여 “민중과 더불어”, “민중 안에”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났다.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1990년대에 들어 구체적으로 민족의 미래와 불가분의 관계인 남북으로 갈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대하여 우선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분단 체제의 극복을 통한 통일운동은 “지금 여기서” 한반도가 처한 최대의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개인이 모여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 안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그 바람직한 모습인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는 통일운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사회와 교회의 관계

이 땅에 가톨릭 신앙이 전래될 당시, 정부의 위정자들은 그때까지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신-)유교가 사회 통합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 가고 있음을 감지하였다. 그러한 상황 인식 하에서 그들은 새로운 종교사상으로서의 가톨릭을 바로 자신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한국 가톨릭의 역사가 초창기부터 피로 얼룩지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 기득권 세력들의 견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1784년에 이승훈의 영세로 그 주춧돌이 놓여진 이래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약 100년에 걸친 혹독한 박해를 겪었다.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시 약 100여 년에 걸쳐 신앙의 자유를 누려오고 있다. 1885년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당시 한국 천주교회의 전체 신도 수는 1만 3천여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 후 높은 성장률을 보여서 천주교 전래 190년이 지난 1975년에 신도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그 성장률은 더욱 두드러져서, 한국 가톨릭 교회는 1998년 말 현재 380만여 명의 대형 신앙공동체로 성장하였다¹⁾.

그러나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표면적인 신앙의 자유 획득과는 달리, 지난 100여 년 동안에도 수 없는 시련과 혼란을 끊임없이 겪어 왔다. 이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는 연이어 제국주의적 침략의 시대를 지나 동족상잔의 아픔까지도 겪어내야 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그 시작에서부터 격동의 시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시련 중에 교회 공동체는 외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숙해져서, 이 땅에 뿌리를 내려갔던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그 첫째 사명을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복음선포라고 보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선교(宣敎 mission)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인 선교가 구체적으로 인간 삶의 자리(Sitz im Leben)와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래

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표, “1998년도 한국 천주교회 교세 통계”, <가톨릭신문>, 1999년 6월 6일자.

서 교회는 선교의 방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성하고 복음의 본래 정신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여 년간의 한국 천주교회를 돌이켜 보면, 교회가 사회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내세의 행복만을 내세울 때 교회의 여타 모든 활동은 사회로부터, 민족으로부터 도전을 받았다. 그러한 도전이 가시적으로는 신자 증가율의 둔화로 나타나곤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교회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선교] 사명은 민족의 기쁨과 슬픔, 민중의 희망과 좌절에 동참하여 복음의 참된 정신을 구체적 삶 안에서 증시(證示)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오늘의 한국 천주교회가 복음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이없는 사랑/친밀감(*philanthropia tou Theou*)”²⁾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항상 원점(原點)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소신(所信)과 행업(行業)으로의 회귀를 등한히 할 수 없다. 바로 거기에서 한국의 가톨릭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루어 오고 있는 괄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이 질적인 성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필 수 있겠다.³⁾

II. 교회의 우선적 선택: 1970년대 한국 가톨릭 교회의 인권회복운동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당면 과제를 논의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의 주요 관심사는 교회의 쇄신이었다. “심각하고도 신속한 변화(*mutatio profunda et rapida*)”⁴⁾를 겪고 있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올바른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오늘화’(*aggiornamento*)가 진행되어 사회 속에 깊숙이 관여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

2) <신약성서, 디도서> 3장 4절.

3) 김녕, “가톨릭 교회의 사회·정치적 영향력과 제약 요인: 한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가톨릭 사회과학연구 9(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1998/5), 139 - 159 참조.

4) 제2차 바티칸공의회, “현대세계의 사목헌장”(Gaudium et Spes), <바티칸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9, 181: 제 5항.

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험 역시 비례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진퇴 양난의 곤경에서 헤어 나오는 길은 이것이다. 즉 교회의 고유 기반과 존재 이유를 다시 묻고 확인하여 그 이해를 깊이 하는 길뿐이다. 그 기반과 이유는 바로 역사상의 한 인물, 그리스도라 부르는 예수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막론하고 모든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그 모든 교회 공동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言行)과 소신(所信)을 오늘에 현실화시키는데 그 타당한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

전국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정통성이 약한 정부가 강압적인 통치를 오랫동안 계속 하여 왔으며, 이러한 권위주의적 정권의 비호 아래 사회윤리의식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소수인들에 의하여 경제 분야 역시 독점되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거의 무한대로 착취하였다. 이렇게 어두운 시절에 이들 눌린(oppressed)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어쩌다 말이라도 한 마디씩 하여 주려고 나선 것은 그리스도교회이었다.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주교들은 인간의 기본권과 공동선 수호를 위해 말해야 할 중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는 결코 순수 종교적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에 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⁵⁾

한국 땅에 복음이 전래된 이래 오랫동안 교회의 주도적인 선교방침은 이 세상의 고통과 억압을 ‘잠깐만’ 참고 견디면 내세(來世)에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내세(來世) 지향적인 것이었다. 내세만을 강조하는 교회의 선교 방침은 신도들을 여하한 것이든 간에 기존 사회질서에 길들이고, 권력이든 금력이든 가진 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시키는 데 이바지할 뿐이었다.

이와 같은 내세 위주의 개인 구복적인 교회의 선교 방침이 민중과 사회의 실제 삶에 대한 관심으로 본격적인 방향 전환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 서고부터이다.⁶⁾ 그 때부터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사회의 복음화”라는 우선적 선택

5) 한국천주교 주교단, “1975년 성년 반포에 즈음하여”, <경향잡지>, 1974년 8월, 15쪽.

6)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천주교회와 정부는 점차 갈등 관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1967년 한국천주교회의 주교단에서는 <우리의 사회신조>라는 교서를 발표하여 증가 일로에 있는 사회적

(preferential option)을 통하여 인간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71년도 가을 천주교 원주교구(교구장 지학순 주교)의 부정부패 추방운동은 교회의 대(對)사회운동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탄이었다. 이어서 나온 1971년도 당시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의 <성탄 메시지>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 관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우리의 고질적 부패와 사회 불안의 심원이 현재의 부조리한 권력과 금력의 정치체제에 있습니다..... 정부나 교회나 사회 지도층은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양심의 외침을 질식시켜서는 안됩니다. 만일 현재의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또한 만일 문제 해결을 힘이나 인간 기본권을 무시하는 강압적 수단에서만 찾는다면, 우리 나라는... 기막힌 운명에 처할 지도 모릅니다.⁷⁾

그러면서 김수환 추기경은 분명하게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에 입각한 국가 정책을 수행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불행과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실제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듯이 교회는 오늘의 사회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⁸⁾

이와 같은 일대 방향 전환에 따라서 1970년대 인권회복을 위하여 교회가 활동한 사례들은 다른 곳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하고 구체적인 예시는 생략하기로 한다.⁹⁾ 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만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1972년도에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1968년에는 급기야 강화도에서 <심도직물 사건>이 발발하였다. 이 사건으로 ‘심도직물’ 노동자들에게 천주교회의 사회적 가르침들을 소개하고 노동조합 결성을 이끌었던 ‘가톨릭노동청년회’(JOC)의 전 미카엘(Michael Bransfield) 신부와 천주교 신자 노동자들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한국의 천주교회가 최초로 사회 문제에 직접 개입하게 되었다.

김녕, “박정희 정권과 교회. 현대 한국 가톨릭 교회와 국가 4”, <가톨릭 신문>, 1996. 10. 27, 16쪽을 참조.

7) 김수환 추기경, “1971년 성탄 메시지”, 한승헌, “사회구원을 위한 아픔을”, <사목>, 1977년 7월, 5쪽에서 재인용.

8) 같은 곳. 명동성당에서 거행된 1971년 성탄 자정미사는 KBS-TV를 통하여 전국에 생중계되던 중이었으나, 김수환 추기경이 강론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의제가 분명해지자 이 중계는 “정전”을 이유로 갑자기 중단되었다. 명동성당의 크리스마스 자정 미사가 다시 “부활”된 것은 17년이 지난 1988년 성탄절이었다.

<가톨릭농민회>가 <가톨릭노동청년회>로부터 분리·독립하여 독자적인 농민운동을 전개하여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가톨릭농민회와 관련하여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사안들로는 1976년의 <함평군 고구마 사건>, 1979년의 <오원춘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가톨릭농민회는 최근까지 “도·농 직거래”의 정착, “우리 밀 살리기”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74년에는 지학순 주교가 구속되는 사태를 맞이하여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발족하게 된다. 1976년 3·1절의 <명동성당 민주구국선언사건>은 이 시기 천주교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벌어졌던 대표적인 인권회복운동이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재위 1978 -)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이와 같은 활동상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였다. 1980년 가을 한국 주교단을 정기 접견(Ad Limina)하였을 당시 행한 교황의 연설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즉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상과 같은 인권 분야의 사목적 과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¹⁰⁾

Ⅲ. 교회의 사회 쇄신 노력: 1980년대 한국 가톨릭 교회의 정의구현운동

1980년대의 한국 교회는 자신의 쇄신을 위하여 계속 정진하였다. “와서 보시오!”라는 표어를 내걸고 1981년에 개최되었던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행사>는 교회의 현황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쇄신을 기하는데 한 몫을 하였다. 한 편 적어도

9) 박일영, “1970년대 한국 가톨릭 교회의 정의구현운동. 사회참여의 근거로서 그리스도 이해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44(연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원, 1988/가을), 9 - 30쪽.

그 외에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 천주교회의 위상. '70년대 정의구현 활동에 대한 종합과 평가>, 분도출판사, 1985; 김녕, “박정희 정권과 교회. 현대 한국 가톨릭 교회와 국가 4”, <가톨릭 신문>, 1996. 10. 27, 16쪽도 참조하라.

10) Andre CHOTTIN, Le pays du matin calme, Coree 81, Eglise 81, <Echange France-Asie Dossier> 69, Paris, 1981/10, 13쪽.

겉으로 보기에, “가서 보여 주어야 할” 교회의 위타적(爲他的)인 자세[代理實在, Pro-Existenz]가 드러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고 평가된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방한과 103위 순교성인들의 시성식(謚聖式)으로 이어진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사업>은 한국 사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위상을 정비 하는데 하나의 굵은 획을 긋는 행사였다. 1980년대를 마무리하는 1989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 44차 세계성체대회>는 교황의 두 번째 방한과 함께, 전 세계 가톨릭 지도자들이 이 땅에 모여들어, 다방면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역량과 발전상을 확인 함으로써, 한국 가톨릭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층 드높였다고 평가된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 가톨릭 교회는 사회정의구현이라는 태도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갔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계산된 과잉 진압에 항의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다수의 성직자, 수도자 그리고 신도들이 투옥과 고문 등 극심한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1985년 여름에는 <학원안정법> 입안 움직임을 보편적인 기본 인권에 대한 박탈이라 규정하고, 동법(同法)의 제정을 저지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 후 교회는 내세의 복락(福樂) 추구만이 아닌, 인간의 “총체적인 구원”(shalom) 문제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기본 태도가 1987년도에 와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의한 <박종철씨 고문치사 은폐사건>의 폭로로 촉발되어, 명동성당을 최후의 보루로 하여 전개되었던 <6·10 민주화 항쟁>, 1989년 천주교 신자 임수경씨의 무사귀환을 위한 <문규현 신부의 파복> 등 일련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운동으로 이어져서 오늘에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¹¹⁾

한 편, 1970년대 인권회복 운동과 비교하여 볼 때, 1980년대 가톨릭 교회의 정의구현운동은 이념적인 측면에서 더 적극적이고 질적으로도 보다 성숙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1970년대 교회의 민주화 운동은 어느 면에서 고고

11) 최종철, “1980년대 교회와 국가: 현대 한국 가톨릭 교회와 국가 5”, <가톨릭 신문>, 1996.11.10, 16쪽 참조: <문규현신부사건> 당시 주한 교황청 대사였던 인도 출신의 이반 디아즈(Ivan Dias) 대주교는 모 일간지와 의 회견에서 문신부가 주교의 승인 없이 정치활동에 개입하였다고 비난하고, 덧붙여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치원 수준인데, 국민들은 마치 대학생처럼 행동하며, 한국의 민주주의(democracy)는 demo-crazy같이 보인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교회 내외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헌신 쓰듯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1980년대에 와서는 비록 전체 교회를 놓고 볼 때 선구적 일부이기는 해도, 낮은 데로 임하여 “민중과 더불어”, “민중 안에”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났다. 그러한 자세야말로 천주교회의 앞날에 대하여 한국 사회가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사실이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낮은 민중 속으로 보내셨듯이, 크리스찬은 또한 민중 속으로 투신하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파견하고 계신다.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민중 속에 자신을 묻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빛을 찾는 ‘민중 속의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의 진리를 가장 진솔하게 증거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¹²⁾

앞에 인용한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 이외에도, 오랫동안 한국 가톨릭 농민회를 이끌어온 정호경 신부가 저술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¹³⁾라든지, 가톨릭 농민회가 편찬한 <해방하시는 하느님>¹⁴⁾ 등의 내용은 낮은 데로 임하여 자기비허(自己脾虛 kenosis)의 길을 간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현대 한국 사회라는 맥락 안에서 따르는 천주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IV. 일치를 위한 교회의 역할 - 1990년대 한국 가톨릭 교회의 민족화해운동

그리스도 교회가 지켜 나가야 할 본연의 임무 중 하나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는” 예언자적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상황하에 서든지 하느님의 정의를 지키려는 자신의 입장을 의연히 간직하고자 한다. 이러한

12)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위원회, <사목회의 의안 12: 사회>, 1984, 23쪽.

13) 정호경,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분도출판사, 1984.

14) 한국 가톨릭 농민회 편, <해방하시는 하느님. 농민공동체의 교리서>, 분도출판사, 1987.

맥락에서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민족의 미래와 그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다.

1. 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한국 가톨릭 교회가 한 일

그래서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1990년대에 들어 구체적으로 민족의 미래와 불가분의 관계인 남북으로 갈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대하여 우선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분단 체제의 극복을 통한 통일운동은 “지금 여기서” 한반도가 처한 최대의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봉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개인이 모여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민족 안에서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 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며 그 바람직한 모습인 화해와 일치를 지향하는 통일운동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¹⁵⁾

그렇게 보면, 정치권에서 정략의 도구로 삼는 이념적인 ‘통일’ 주장이나 일부 종단이 내비치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직접 ‘전도’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현시점에서 남북한간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에 별 효과가 있을 수 없다. 아니 그러한 시도는 전혀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교류 상대방인 북한 당국이 그와 같은 강제적 통일이나 일방적인 전도를 전혀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이 적화통일을 바라지 않듯이 북한은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통일의 가능성 중 어느 한가지도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룩되어야 할 민족 전체의 화해와 재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아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통일은 통일 자체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가 더 큰 문제임을 우리는 근간에 통일을 이룬 몇몇 나라들에서 발견한다.

한국 가톨릭 교회의 역할에 국한시켜 논의를 좀 더 진전시켜 보자. 국토의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은 화해와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할 민족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모아진다고 하겠다. 한국의 가톨릭

15)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민족화해학교 편, <민족의 화해를 향하여>, 도서출판 새남, 1996 참조; 강인철, “종교와 통일운동-한국 천주교회의 사례”, <종교문화연구> 1 (한신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1999), 35 - 61도 참조.

교회는 먼저 어떠한 자세로 민족 공동체 정신을 회복할 것인가.

첫째, 남북한 교회의 만남은 민족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위한 대화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남한 교회측에서 볼 때, 그것은 북한의 교회를 알아보고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설익은 '선교'나 선부른 '전도'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즐기치게 "종교는 아편"이라는 투의 반종교적인 의식화가 이루어진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에게 "내가 다니는 종교를 너도 믿어야 복 받아서 천당 간다."는 막무가내의 공격적이고 주입식 전도는 별 무 효과일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또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서구 열강에게 당한 피식민 지배의 경험을 공유하는 제3세계 여러 나라가 한결 같이 경계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선교'라는 미명하에 제국주의의 식민지 확장 정책에 앞장섰던 과거 선교 역사의 업보인 것이다.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선의로 순수한 선교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측에 의하여 또 다른 침략의 형태로 왜곡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러므로 교회 차원에서 시도되고 이루어지는 북한과의 교류는 북한이 그리스도교 일반이나 특정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이해나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러한 이해나 판단이 과연 타당한지를 논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1995년 뉴욕에서의 첫 만남 이후 1997년에는 다시 최창무 주교(당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 담당 주교, 현 광주대교구 부교구장 대주교)를 비롯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대표단과 북한의 <조선천주교인협회> 장재철 위원장 등 북한측 대표가 북경에서 만나 "평화통일을 위한 천주교인들의 역할"이란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1998년에는 마침내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대표단의 평양 방문이 성사되었다.

둘째로, 민족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남북 교회간의 교류는 북한의 교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순수성을 존중하는 관용의 정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북한에서 종교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일견 종교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인상을 준다. 1988년에는 평양에 <장충성당>이 건립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바티칸 외교사절의 자격으로 장익 신부(현 춘천교구장, 주교)와 정의철 신부가 장충성당 축성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에 앞서 1985년에는 적십자 고향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지학순 주교(당시 원주교구장)가 북한에서 미

사를 봉헌하였으나, 그 때에는 남한에서 간 방문단 사람들만 그 미사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년이래 북한 종교상황의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 표면적임을 교회는 또한 감안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종교를 모르며 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지니고 지난 반세기를 살아오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활동하는 북한의 종교인들은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의 가톨릭 교회가 그들의 순수성을 의심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근까지 북한에서는 신앙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었다. 정치-외교적인 목적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종교활동을 허락 받았다 하더라도, 북한의 전체적인 분위기 상 누구라도 몇몇하게 종교인임을 자처하고 선뜻 나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인으로 활동하는 북한 사람들의 신앙심을 폄하(貶下)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을 신앙인으로 인정해주고 포용하는 너그러운 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남북한 천주교회간에 교류와 만남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양측의 교회가 단일 민족으로서 역사적 전통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현상을 인식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차이가 많다. 또한 미래지향의 성격을 갖는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인 신념도 서로 다르다. 그런 현상적 차이들을 들추기보다는 우리는 오래 전부터 한 민족, 한 핏줄이었다는 민족동질성의 차원에서 교류의 첫발을 떼 논 것이다. 즉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풍습과 역사, 문화를 오랫동안 공유해온 민족공동체라는 점에서 교류와 만남의 근거를 찾아야겠다는 자세이다. 이런 자세로 양측이 계속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남북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신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996년 여름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주관하는 북한 수재민 돕기의 일환인 <국수나누기운동>은 좋은 예가 된다. 남한의 신자들이 저마다 수입의 0.2%를 매달 봉헌한 돈으로 북한에 국수공장을 가동하여 굶주리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다는 구호활동이다. 춘천교구에서도 독자적으로 모금을 하여 북한 지역 강원도에 식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혹은 해외 교포 신자들이 나서서 의류나 의약품을 마련하여 보내기도 하였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평양 소재 장충성당에 <자전거 2백대 보

내기 운동>을 벌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활동은 어떤 고매한 종교적인 이상 이전에 한 핏줄을 나눈 동포, 형제와 화해하고 생명을 나누는 일이다. 특히 음식을 나누는 일은 인간간에 신뢰를 구축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모든 종교의례에서 음식이 빠지는 법이 없다.¹⁶⁾

2. 민족의 일치를 위하여 한국 가톨릭 교회가 할 일

이상에 언급한 성격을 지니는 민족공동체의 일치를 위하여 한국 가톨릭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이다. 일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의 잣대로 재면,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북한은 그 자체가 거대한 “종교” 집단으로 보일 수도 있다. 주체사상을 절대이념으로 삼고, 특정인을 신격화하며, 공산당이라는 정치조직을 유일한 지도체제로 여긴다는 점에서 소위 ‘대용종교’(代用宗教)의 면모를 찾아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당사자인 북한 사람들은 다르게 주장한다. 그들 주장대로라면, 그들은 그러한 행동을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남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그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양 측 모두 현상적인 차이에만 집착하게 되면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의 예에서처럼 동포애에 근거한 식량의 원조라던가 신뢰심에 바탕을 둔 만남과 교류의 지속적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천주교 행정 편제 상 재북교구(在北敎區)의 기능회복이다. 평양교구와 함흥교구 그리고 서울대교구의 일부와 춘천 교구의 일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실적으로 바티칸에서 북한 지역에 교구장들을 임명하고, 남한 출신 성직자들을 파견하는 등 교계제도를 부활시켜 일하는 합법적인 활동을 당장 기대할 수는 없다. 우선 가

16) 박일영, “무속의 대동잔치”, <종교신학연구> 3(서강대학교, 1990), 115 - 144 참조. 이 논문은 제 44차 세계성체대회 기념학술대회 “제찬과 성찬”에서 발표되었다. 그 외에도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논문들, 즉 “박선영, 불교의 공양”, “최기복, 유교의 음복”, “이흥기, 천주교의 성찬” 그리고 “서공석, ‘제찬과 성찬’ 종합 발제” 등을 보라. 같은 책, 112 - 328.

능한 한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현재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북교구 출신 가톨릭 신자들이 모이는 <신우회>(信友會)의 활성화이다. 해방과 6·25를 전후하여 월남한 가톨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움직이던 재북교구 신우회는 세월이 지나고 구성원들이 노쇠하면서 그 활동도 한동안 위축되어 왔다. 이제 재북교구 신우회를 이끌어 나갈 인력은 그 2세들이나 연고자들을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리하여 그들 2세들을 중심으로 신도모임의 정례화, 북한 알기 강좌의 개설, 통일기금의 적립 등의 활동을 추진하면서 북한 교회와 신앙의 형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이북 출신) 동포 신자들을 활용하여 남북 교회간 가교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포함된다.

셋째,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사목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산하에는 1988년 5월에 창립된 <통일사목연구소>가 있다. 이 연구소야말로 주교회의 직속의 유일한 북한 관련 연구소로서 명실상부한 기능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연구소 명칭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조직정비와 프로그램의 개발, 북한 관련 전문가의 양성 등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아직도 진행 과정 중인 민족 화해를 위한 사목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자. 먼저, 한국의 가톨릭 교회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민족화해위원회를 주축으로 하여 남한 이주자 [탈북 귀순자]들에 대한 후원이다. 전혀 다른 사회구조 속에서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충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이들을 누구보다도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보듬어야 할 것이다. 이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경험을 잘 활용하여 멀리는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공산주의식 적화 통일을 이룬 베트남이나 자본주의식 흡수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정적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그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통일의 기쁨이 생활의 슬픔”이 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준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 비용을 감당할 기금을 마련하는 데에 신앙인들이 모범을 보이도록 의식을 계발하는 사목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교구의

경우, 1998년도에 평신도협의회 차원에서 <통일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1998년 8월 현재 3억 여 원을 모금하였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¹⁷⁾ 그것은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바를 북한의 동포들과 서로 나누고 서로를 섬기는 희생으로 여기도록 하는 성숙한 한국적 영성(靈性)의 계발과 체현(體現)에도 관계된다.

그 다음으로, 정신적인 지주를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후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공허감을 달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종교를 찾아 나서는 경우를 우리는 구소련이나 동구권의 여러 나라에서 목격하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의 동포들이 올바르게 성숙한 신앙을 찾아 실천하도록 준비하고 돕는 일도 먼저 신앙을 찾아 실천하고 있는 남한 그리스도인들의 몫이다.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준 사랑과 자비를 행동으로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다. 그 사랑이란 바로 하느님과 인간이 일치하여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오랜 세월 너무나 다른 사상과 체제 속에서 다른 길을 걷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맡도록 하는 교회정책이 심도 있게 계발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그리스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2천년을 기념하는 대희년(大禧年)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화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대희년에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라는 과제를 가장 우선되는 통일실천운동으로 이끌어 가는 정책 수립을 하여야 할 것이다.

타종교 단체들이나 종교 일반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본다. 민족화해의 정신을 회복하는 일은 민족의 재일치, 즉 통일의 지름길이 된다. 그렇다면 민족화해의 과업이야말로 어느 종교, 어떤 신앙을 막론하고 지금 이 땅의 종교들이 우선적으로 실천할 일이다. 그와 같은 인식 하에서 한국의 종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세확장을 '전도'나 세 불리기 식의 경쟁적 '포교' 양태를 지양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의 경우라면, 가톨릭이거나 개신교이거나, 먼저 '선교'의 본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교 정책상 우선적 선택은 그리스도교 선교의 본래 의미인

17) 우재철, "광복절 특별기획. 교회통일운동을 점검한다", <가톨릭신문>, 1998. 8. 16., 13쪽.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가이없는 사랑”(디도 3, 4)을 실천하는 데에 두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1982년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산하에 <북한선교부>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1985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산하로 그 소속이 바뀌면서 <북한선교위원회>로 개칭된 북한 관련 기구의 명칭도 재고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교 역사상 많은 경우에 ‘선교’라는 명칭이 붙은 기구들이 제국주의적인 식민지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하여 명칭 때문에 교류 상대방에게 쓸 데 없는 의심을 품게 하고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같은 목적의 기구이면서도 <민족화해위원회>라든지 <민족화해학교>를 광복과 분단 50주년인 1995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사례는 훨씬 진일보한 인상을 준다. 같은 목적의 전국 기구로 1997년 말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산하에 <민족화해 주교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 이미 앞에서도 한 차례 언급한 바 있는 - 주교회의 산하 <통일사목연구소>의 명칭도 재고되어야 하겠다.

북한의 형제와 가진 바를 나누는 일은 품앗이나 계(契) 등 이웃사촌의 정신을 활성화하는 한국적 영성(靈性)의 계발과 관련된다. 이웃사촌 정신의 활성화란 단순한 베풀이나 알뜰한 선심 쓰기가 아니다. 다른 말로 그것은 한국적 영성의 체현이고, 한국 가톨릭이 자랑하는 순교(殉敎)정신의 현대화이다. 순교를 하느님과 인간이 이루어야 할 화해와 일치를 위해 감당해야 할 희생 또는 “나눔과 섬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북한의 동포와 나누는 일은 오늘 이 땅에서 그 자랑스러운 순교정신을 제대로 고양(高揚)하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 자세야말로 이 땅에서 한국적 영성을 토착화하는 일이다.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에 참다운 평화통일의 길도 준비될 것이다. 그리스도교의 안목으로 볼 때에, 평화통일이란 바로 - 그리스도교의 성서가 말하는 바 - 하느님이 마련하는 총체적인 평화로서의 ‘샬롬’(shalom)의 실현이다. 그것은 화해와 일치, 나눔과 섬김의 결과로 열리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 세상으로서의 ‘하느님 나라’(basileia tou Theou)이다.

V. 맺음말: 사회쇄신의 길잡이로서의 교회

이제까지 지난 한 세대 동안 한국 천주교회가 대(對)사회적으로 해 온 기능과 역할을 10년 단위로 묶어서 뒤돌아보았다. 각각의 10년대 별로 이슈가 되었던 주도적인 사안을 대표적으로 한 가지씩만 뽑아, 한국 천주교회의 지난 한 세대 사회적 역할의 맥을 짚어본 셈이다. 끄트머리에서는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한국의 천주교회와 또 이웃종교들이 함께 매진하여야 할 과제들에 대하여도 주마간산 격이나마 생각해 보았다. 물론 이상에 언급한 내용들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라던가, 도시빈민 사목, 사회복지, 여성 문제, IMF 경제위기 극복문제¹⁸⁾ 등 많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나름대로 애써 오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희귀한 역사적 전환점인 새 천년(millennium)과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한국 천주교회가 시행하려고 하는 인간 사회를 다시 그리스도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추어 새롭게 인간화¹⁹⁾하여야 할 ‘새로운 복음화’의 연구와 실천에 거는 기대 역시 국내외에서 무르익어 가고 있다.

“때때로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도 관습과 의식 속에만 남아 있을 뿐, 출생과 고통과 죽음 등과 같이 인간 실존의 극히 중대한 순간에는 점점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거기서 해답을 전혀 모르는 엄청난 문제와 수수께끼들이 생긴다..... 분명코 인간 사회를 다시 그리스도화하는 일은 전세계 도처에서 절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새로운 복음화는 개인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전 인구를 향한 것이다.”²⁰⁾

18) 강인철, “IMF 구조조정과 한국 가톨릭 교회의 대응 방안: 평가와 전망”, <가톨릭사회과학연구> 10(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1999/1), 139 - 157 참조.

19) 김수환 추기경은 1995년 11월 23일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에서 행한 강연, “교회는 왜 사회문제에 참여하는가?”에서 사회참여는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온 인류가 모든 차별을 넘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리와 사회정의의 위해 나름대로 희생을 치러가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으로써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인간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인간은 그리스도의 길이요, 인간은 교회의 길이라는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 “서울대학교 특별강연 요약”, <가톨릭신문>, 1995. 12. 3일자 5쪽 참조.

갈등과 상극의 시대를 지나 세계는 바야흐로 공존과 상생의 정신을 존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호존중의 조류는 종교문화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현대 한국 사회는 다양한 종교들이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다종교 공존의 사회이다. 새 천년을 앞두고 미증유의 희귀한 전환기에 살면서 한국인은 지금 어느 때보다 강한 불안 심리를 갖기도 한다. 이러한 때에 한민족의 강한 종교심이 발동하여 종교의 새로운 부흥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종교들의 약진이라던가 새로운 영성 운동의 출현, 기성 제도종교들 안에서 신비주의류 현상들도 자주 눈에 띈다. 수많은 종교들의 동시적 부흥은 자칫 종교간의 분쟁 소지를 이 땅에서도 배태할 수 있음을 우리는 근간에 체험하였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포용성과 아량으로 “이웃종교”(neighbour religions)를 대하면서 자기중심주의적 독선을 물리치고, 다중심적(多中心的, poly-centric) 대화와 협력에 한 몫을 하여야 할 터이다.

다음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분야는 참다운 권위의 재건이다. 의지해야 할 가치 척도로서의 규범이 무너짐으로써 이 사회에서는 올바른 권위가 실종되었다. 권위(權威 auctoritas)라는 말은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저울질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확하게 저울질하려면, 잣대[尺度, 規範]가 정밀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척도를 다시 만들어내어 제시할 때 참다운 권위는 회복된다. 가톨릭 교회는 백여 년 전부터 기술산업사회의 가치를 재는 “잣대”를 본격적으로 계발해 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가톨릭 사회론>(social teaching)²¹⁾이다. 한국 천주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가톨릭 사회론을 적용하고 스스로 실천할 때에, 이 사회에 바른 권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의 강한 종교심성을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적극적 원동력으로 고양시키는 문제이다. 무분별한 격정의 폭발이라던가 한풀이가 아닌, 적극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그리스도풀이”(Christo-therapy)로, 그리스도의 평화로 이끌어 가는 길을 찾는 작업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듯이, “신인(神人)으로서 자신을 비우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가난하게 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이 사회에 구현되는 날도 요원하지만은 않으리라.

20)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강대인 역), <평신도 그리스도인> (Christi Fideles Laici, 1988. 12.3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9, 34항.

21) A. 라우셔 외(한국가톨릭사회과학연구회), <사회라는 울타리 1. 사회교리해설>, 바오로딸, 1994 참조.